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중-03863호

창간 30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P 공항가는길 주차장 무료셔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세차무료(외부) 주차비저렴
Tel. 744-1199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

漢拏日報 제8878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6월 11일 화요일(음력 5월 9일)

공항·제주항 택시 할증 "없던 일로"

도, 반대 여론 의식해 정책 폐지 후 개선안 추진
업계 퍼주기 논란 '회당 2200원 지원' 쿠폰 유지
대중교통 체제 개편에 쿠폰제 시행 취지도 무색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택시 할증운임 요금조정안을 폐지하고 기존 쿠폰제를 유지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정책을 결정한 데 이어 보름도 안돼 폐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당 2200원을 투입해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쿠폰제 사업도 지속할 당위성을 잃고 있어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할증 운임 도입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할증 운임안은 평일·주말 모두 오후 7시~오전 1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할증운임료 2100원을 적용하는 안이다. 이 할증 운임안은 내용 자체로도 논란이 됐지만 쿠폰제를 없애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쿠폰제는 공항 이용객들이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민원을 지속 제기하면서 택시의 공항 유도 대책으로 2016년 10월 도입됐다. 제주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를 대상으로 회당 2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만 5억원 이상이 투입돼 '택시업계 퍼주기'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할증 운임안 도입은 쿠폰제를 없애 행정 예산 투입 부담을 줄이고, 택시 지원액 보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얄팍한 대책이라는 여론의 반발을 샀다.

문제는 쿠폰제 유지도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쿠폰제 도입 당시 공항의 버스 노선은 시내권으로 제한됐고 택시는 야간운행이나 단거리를 기피했기 때문에 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을 빠져나오는 일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와 교통 불편 해소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제 개편으로 공항에서도 버스를 이용해 제주도내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쿠폰제 유지 당위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택시 지원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은 짐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택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반대여론이 심한 만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0일 오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할증운임 도입안을 제외한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을 검토했다.

내용을 보면 택시 기본운임(2㎞까지)을 ▷소형택시 기본운임 2200→2300원 ▷중형택시 2800→3300원 ▷대형택시 3800→4500원 등으로 일부 조정했다. 이소진기자

제주 해안 수놓은 수국길 10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만개한 수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에 국제보호 연구센터 들어서나

유네스코 사무국 타당성 조사
올 11월 승인 여부 결정 예정

유네스코 사무국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카테고리2센터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이하 센터) 유치·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제주에서 시행한다.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전 세계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의 역량 강화와 보호지역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유치 설립을 추진하는 기구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 의지와 역량을 평가받는다.

제주도는 국제보호지역 관리역량과 그동안 센터 설립을 위해 벌인 노력, 그리고 국제 환경협력에 대한 제주의 관심과 기여도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조사 첫날인 13일 제주도청에선 유치 및 설립 타당성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와 유네스코 조사관과의 질의응답이 간담회 형태로 진행된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주 사무실이 위치할 예정인 제주 돌문화공원과 교육이 이뤄지게 될 세계자연유산센터와 동백동산습지센터, 숙박시설인 에코촌 등에 대한 시찰이 예정돼 있다. 이어 14일 조사단은 서울에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설립 관련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 후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대한 안건은 하반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상정되고, 최종적으로 올해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도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가 유네스코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보호지역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센터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평택항 쓰레기 '제주산 논란' 종지부

필리핀서 반송 불법 폐기물
환경부 등 4666t 처리 완료
제주 발생 쓰레기 확인 안돼

잘못된 정보 유포 경기도에
제주도, 사과 요구하기로

필리핀에서 반송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보관 중이던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가운데, 해당 쓰레기에 제주도 압축 폐기물이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택항에 있는 쓰레기를 제주산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결국 잘못된 정보임이 확인됨에 따라 정정 및 사과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4666t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G사 및 J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t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t 등 총 4666t의 폐기물이 보관돼 있었다. 이는 컨테이너 195대 분량이다.

제주도와 환경부 관계자는 "(평택항 쓰레기 전량 확인한 결과) 제주산은 없었다"며 "포장방법, 분쇄된 모양 등 외형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3월 28일 개인 SNS에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그 압축 폐기물이 경기도 평택항으로 되돌아왔다"며 "알고 보니 이 중 상당량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라는 보도가 뒤따랐다.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정작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경기도에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G사가 지난해 7월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해 지금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5100여t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12일쯤 파견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필리핀에 보관된 폐기물 5100t 중 제주산 압축 폐기물은 1880t(36.8%)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환경부 대표단과 함께 현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에 의뢰해 군산항과 광양항에 보관 중인 압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전체 8637t 중 571t(6.6%)을 처리했다. 제주산 압출 폐기물 625t이 보관된 광양항은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군산항은 항외(外)에 보관돼 있어 처리가 쉽지만, 광양항은 항내(內) 위치해 있어 처리를 위해 행정 허가가 필요항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진기자

지하수 민원 신청 손쉽게
도,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정보관리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각종 지하수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지하수 정보 및 관측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도민들은 원수대금 부과납부 현황 등 지하수 관련 정보 열람이 어려웠고,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에서도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지하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해 지하수 정보 조회, 원수대금 조회·납부, 각종 인허가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도민 편의제공은 물론, 지하수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서비스한다. 또한 모바일 기반 정보통신(IT)기술을 도입해 지하수 현장조사 및 시설점검의 효율성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 및 자료 활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대로기자